

## 일본 외국인 이주자의 다규모적 정체성과 정체성의 정치

Multi-scalar Identities of foreign immigrants and identity politics in Japan

최병두\*

이 논문은 우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의 재구성을 유형별로(결혼이주자, 중국귀국자, 남미 일계인, 재일 한국조선인, 동남아 이주노동자 등) 살펴보기 위해 국가적 민족성을 규정하는 혈통(인종)과 일상생활의 장소성에 근거한 생활문화를 두 축으로 정체성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정체성이 일본 주민이나 지역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관련적 및 다규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혁신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최근에는 지자체들의 혁신/보수 성향과 거의 무관하게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들의 성향도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 특히 최근 보수적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은 실제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화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 정책은 일본 인종과 문화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일본인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의 한 변형으로 주장된 ‘간인주의’는 그러나 국지적 생활공간에서 다문화적 정체성이 왜 필요인가 또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이해된다. 끝으로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진정한 다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본 사회도 새로운 지역적, 국가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지구-지방적 시민성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요어: 일본, 외국인 이주자, 다규모적 정체성, 일본인론, 정체성의 정치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bdchoi@daegu.ac.kr)

## 1. 서론

현대인들은 복잡한 사회공간적 관계 속에서 여러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또는 여러 신분들을 함께 지니게 됨에 따라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사회가 인종·문화적으로 혼합된 다문화사회로 전환함에 따라, 초국적 이주자들은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생활양식과 가치, 태도 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주국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이중적 또는 ‘혼종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즉 오늘날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이주자들은 출신국과 이주국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거나 또는 이들을 초월한 ‘초(trans)국가적’ 또는 ‘탈(post)국가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은 매우 가변적이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다규모적(multiscalar)’ 양상을 보이게 된다.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생활이 영위되는 장소, 즉 생활공간에 근거를 두고 형성된다. 그러나 기존의 삶이 영위되던 장소를 떠난 초국적 이주자들은 새로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자 하지만, 또한 동시에 모국에서의 경험이나 기억에 근거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를 새로 정착한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초국가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물론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이 유입된 지역의 원주민들도 낯선 이방인들의 등장과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도 변화시키게 된다. 즉 다문화사회에서 정체성의 변화는 단순히 외국인 이주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과의 상호관련적 전환을 전제로 한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의 재구성은 그 지역의 지자체 정책이나 지원단체들의 활동에 좌우되기도 한다. 즉 외국인 이주자들이 집중된 지역들, 특히 보다 혁신적 성향을 가지는 지역의 지자체들은 이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유입목적의 원만한 실현(예로, 이주노동력의 활용), 이들의 유입에 따른 원주민들과 갈등

의 최소화 등을 위해서 이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자 한다. 물론 새로운 지역사회에 정주하게 된 외국인 이주자들도 자신의 혈통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제도적 이주 배경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처럼,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단체들의 활동도 그 구성원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문화적 또는 혼종적으로 재구성하고 또한 이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지역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은 어디까지나 지역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가 차원에서 지배권력(또는 중앙정부)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를 거부하면서, 기존의 국가적 정체성에 집착한 정책이나 담론들을 유지·강화시키고 이에 바탕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들을 통제·관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가적 정체성의 유지/변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은 이주자의 신분이나 체류자격(즉 국가적 시민권 부여 여부) 등을 포함한 이주정책을 규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 이주자들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지만, 이주국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 정체성을 제한 당하게 됨에 따라, 지역적 정체성과 국가적 정체성 간에 심각한 괴리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보수적 정권이 중앙정부나 대도시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이주정책을 입안·시행할 경우, 풀뿌리 차원에서는 점차 다문화적 정체성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이를 통제하고 기존의 국가적 정체성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중앙 간 갈등이 노정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이주자들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국가적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맞게 되었다. 근대화 이후 일본은 역사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단일인종·단일문화에 바탕을 둔 동질성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일본은 20세기 전반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식민지 침탈과 지배과정에서 자국민의 우월성과 특이성을 부각시켰고,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세계적 경제대국이 되면서

이러한 일본 민족성의 우월성과 특이성을 재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전통적 정체성과 그 특성에 관한 담론은 흔히 ‘일본인론(Nihonjinron)’으로 명명되어 왔으며, 자민족중심주의에 근거한 이데올로기라고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추구하게 된 ‘다문화공생’ 정책과 담론에도 이러한 일본중심적 정체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며, 최근 일본 경제의 침체와 일본 정치의 보수화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동질성에 근거하여 전개하는 정체성의 정치에 반대하여, 외국인 이주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단체들은 대안적 정체성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이 논문은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다규모적 정체성과 이들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이념적 성향 및 지역단체들의 정체성을 유형별로 살펴보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이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적 전통성과 이와 관련된 정체성의 정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다문화사회에서 정체성의 형성과 정체성의 정치를 사회관계적 측면과 공간적 다규모성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일본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동향을 개관한 다음, 일본 외국인 이주자 집단들의 유형별로 다양한 정체성의 다규모적 특성과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및 사회단체들의 활동에 내재된 정체성을 고찰하고, 나아가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의 특성 및 변형 과정을 ‘일본인론’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최근 보수적 정권에 의해 추진되는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정체성의 정치를 분석하면서 지방적 시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2. 다문화 사회의 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연구 동향

### 1) 정체성의 상호관계적 형성과 변화

정체성(identity)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고 중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가, 타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자신과 타자들로 구성된 사회공간적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최병두, 2008). 개인은 자기 정체성을 통해 자신의 주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관한 일련의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은 한편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인종성(또는 혈연성)에 근거를 둔다고 할지라도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의미도 사회적으로 부여되며, 또한 생활과정을 조건지우는 사회 제도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공간적 상호관계를 통해 변화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개인적 정체성은 그 개인에게 일정한 역할과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사회정치적 단위체 즉 지역사회나 국가 나아가 세계 구성원들 간 공유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정체성은 개인에게 자신에 속한 집단과의 소속감이나 동일시를 통해 안정된 느낌을 준다. 즉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나 장소는 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존재론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개인이 공동체나 장소에 부여한 정체성은 간주관적으로 결합되면서 사회공간적으로 합의된 공통의 정체성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이다(Relph, 1976). 그러나 오늘날 정체성은 전통적 장소나 공동체 사회에서 단순히 한 개인이 얻게 되는 경험이나 지식만이 아니라 개방된 사회공간에서 타자와 부단한 관계 속에서 경쟁적, 갈등적 투쟁을 통해 구성·재구성된다. 물론 이렇게 해서 형성된 정체성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때로 심각한 대립적 관계 속에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인종적·문화적으로 혼합된 다문화사회에서 새로 유입된 외국인 이주자들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정체성은 보다 대립적, 갈등적 관계를 보

이면서, 혼종적, 다규모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초국적 이주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경을 가로질러 이주를 하지만, 이들은 상품이나 자본의 이동과는 달리 과거 자신의 삶을 통해 구축된 정체성을 명시적 또는 잠재적으로 체현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체현은 인간이 태어나 자란 장소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특별히 의식되지 않지만, 초국적으로 이주하여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이들은 출신국의 가정이나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서 체득된 정체성 뿐만 아니라 이주국에서 정주하여 기존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과 혼합된 이중적 또는 혼종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오늘날 외국인 이주자들은 정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다소간 정체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주국가에 대한 애착이나 헌신성 등의 국가적 정체성은 거의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모국과 물질적, 정신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출신국 및 이주국 양국 모두에도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는 초국가적 또는 탈국가적 정체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 특히 다문화사회에서 형성되고 작동하는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징, 즉 상호관계성과 다규모성을 가진다. 우선 정체성은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따라서 다원적, 가변적, 갈등적이고, 항상 권력관계를 내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정체성은 개인의 타고난 신체적 조건(예로, 인종, 성, 장애 등)이나 제도적 조건(계급, 국적, 종교, 언어 등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이 조건들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능적으로 분화함에 따라, 사람들(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상호관계는 점점 더 다원적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단일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어떤 역할이나 지위를 가지는가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다원적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역할이나 지위를 수행하고 변화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은 안정되고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

환하는 유동적, 가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어떤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생성과정에 있기 때문이다(Keith and Pile, 1993: 28).

정체성이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재형성된다는 점, 즉 정체성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적이라는 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다. 하버마스(Habermas)의 의사소통적 상호행위론이나 라캉(Lacan)의 정신분석학에 근거한 욕망이론, 푸코(Foucault)의 권력/지식과 주체에 관한 이론 등은 사람들 간 상호관계 속에서 정체성의 형성과 이에 근거한 신뢰나 믿음 또는 불안과 저항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최병두, 2008). 특히 홀(Hall, 1990; 1996)은 이러한 상호관계를 정체성의 ‘밀고 당기기(push and pull)’로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정체성은 외적 담론과 실행 그리고 주관성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 간의 상호교차 점에서 구성된다. 밀고 당기기 과정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점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을 확인하고 통일된 정체성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상호 인정받고자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적 통일성으로서 정체성이라는 사고는 허구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상호인정으로서 정체성 역시 단지 한 개인에 속하는 어떤 주관성이 아니라 공유된 생활공간을 통해 형성되는 간주관적 공동체의 집합적 실체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밀고 당기기’ 과정은 흔히 ‘정체성의 정치’ 또는 ‘차이의 정치’로 지칭된다. 사람들 간의 차이는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체성의 정치는 차이 또는 타자성에 대한 인정과 관련된다. 정체성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정체성에 저항하거나 이를 능가하고자 하지만, 또한 기존의 배타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 역시 정체성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예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은 일본의 인구 구성 변화와 더불어 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일본인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을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게 되었고, 나아가 지역적, 국가적 정체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Goodman et al., 2003). 정체성의 ‘밀고 당기기’의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일본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관계적 정체성에 대항하는 밀기(push) 요인이 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타자성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반면 일본의 지배적 집단의 이데올로기와 담론들은 이러한 새로운 타자성의 영향과 이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를 가능한 억제하고 기존의 동질적 정체성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당기기(pull) 요인이 된다(Burgess, 2004).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은 항상 조화롭기보다는 상호 갈등적 긴장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즉 정체성, 보다 정확히 말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에는 대립적 권력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정체성은 상호관계 속에 있는 각 개인에게 현재 위치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치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포함하고 있다. 즉 기존 질서를 지배하는 정치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정체성의 정치는 현재의 주체 형태를 고정시키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질서 속으로 통합해 내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체성의 정치는 상호관계적이기 때문에, 기존 정체성에의 통합에 대한 요구에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저항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체성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체성이 단순한 소속감 이상의 어떤 것, 즉 권력의 행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담론들(대표적으로 언어, 교육, 대중 매체)이 전략적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 2) 정체성의 장소성과 다규모적 재구성

다문화사회에서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된 또 다른 (보다 중요한) 특징으로, 정체성은 장소기반적이지만 또한 탈장소적이며, 이에 따라 간공간적일 뿐만 아니라 다규모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람

들은 자신이 삶이 영위되는 공간과 시간상에서 어떤 위치를 가진다. 물론 이 위치는 절대적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와 동일시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선택하게 되며, 선택된 역할과 행동은 다시 그 사람의 위치를 변화시키게 된다(Hall, 1990; 1996). 전통적 지리학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시공간적 위치는 ‘장소’, ‘생활공간’, ‘국지성’ 등으로 이해된다. 장소는 지표면의 일부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그 유용성과 의미가 부여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장소의 구성은 장소와 관련된 주체들이 다양한 장소적 특성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통합하는 과정, 즉 장소적 정체화 또는 동일시 과정을 전제로 한다. 장소 정체성은 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뿌리내림(착근화)’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강화되거나 또는 이동성(탈착근화)으로 인해 약화되기도 한다(Relph, 1976).

장소 정체성 역시 그 형성 및 변형 과정에 헤게모니와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근대 국민국가의 발달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체성의 강화를 전제로 한다. 즉 근대 국민국가의 발달은 예로 영역적 경계(예로,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 설정, 배타적 제도(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 규정) 시행, 상징적 담론이나 상징물(예로 국민주의나 국민적 상징물로서 애국가, 국기, 민족주의 등) 보급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정치경제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민들을 국가적 정체성의 틀 속에 가두어놓기 어렵게 되었다. 경제의 지구화과정과 더불어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적 압축 과정은 국지적, 국가적 정체성을 점차 약화시키고, 사람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 즉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지배적 조직의 원칙은 국지적 사회와 공간에 근거를 둔 사회적 제약이나 문화적 정체성과 분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화 과정과 흐름의 공간 속에서, ‘나는 (또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의문은 사라지기보다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즉 지구화 과정 속에서 상품이나 자본, 정보의 지구적 이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초국가적 이동도 크게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과거 국가와 동일시하던 정체성의 정도는 점차 약화된 반면, 국민국가의 차원보다 위의 지구적 차원 그리고 이보다 아래의 국지적 차원의 정체성이 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국경을 가로질러 이동한 초국적 이주자들에게 국가적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지구적 및 지방적 정체성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주한 지역구적 및 원주민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국지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한편, 태어난 모국 및 고향과의 연결 및 속함으로써 초국가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이 가지는 정체성은 양 국가의 경계에 위치한 경계공간(또는 이를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탈경계적 공간) 또는 양 국가의 사이에 형성된 사이(또는 間, in-between, 공간)에 위치하면서 어느 한 곳에 고정되지 않은 '유연적' 또는 '유목적' 정체성으로 특징지어지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탈)경계적 공간, 간공간, 제3의 공간 등으로 개념지워지는 공간에서의 혼종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이른바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연구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탈식민주의 문화이론을 주도하고 있는 바바(homi bhabha)의 연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질적 문화 요소들의 융해와 혼합 그리고 이를 통해 재구성되는 경계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들 간 '사이공간'에 주목한다. "이러한 사이공간들은 —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 — 정체성의 새로운 기호 ... 등을 선도하는 자아감을 정교하게 하는 전략들을 위한 영역을 제공한다"(bhabha, 1994: 1). 바바에 의하면, 현대 사회의 특징인 자본의 지구화 과정으로 사람들의 대이동이 발생하고 이질적 문화들이 만나서 문화적 혼종성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혼종적이고 전환적인 정체성이 창출되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경계적 존재들로 하여금 창조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제3의 공간'을 만들어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이소희,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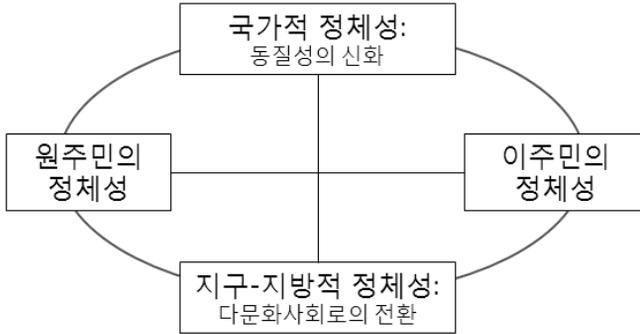
지구화 과정과 이에 따른 초국적 이동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은 탈식민주의뿐만 아니라 초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 등의 입장에서 다소 다르게 접근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현대인 특히 초국적 이주자들의 정체성은 고정된 장소나 위치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리적 이동과 새로운 지역의 정착, 즉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유동적 것으로 이해한다. 즉 오늘날 세계도시-지역을 배경으로 형성되는 정체성은 매우 복잡하고 유연하고 유동적이며, 탈영토적이며 동시에 재영토적이다(Sassen, 2002). 그러나 현대인의 정체성이 유동적이라고 할지라도, 생활공간을 초월한 비장소적 정체성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장소에 근거를 두고 삶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국지적 장소 정체성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도시적 맥락에서도 작동한다. 만약 지방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지역 공동체를 거부한다면, 결국 세계도시에서의 삶은 개인주의의 뒷에 빠지거나 전체주의의 그물에 사로잡히게 된다(Cupers, 2005). 이러한 점에서, 국민국가의 하위 단위 지역에서 형성되는 국지적 정체성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구화된 사회라고 할지라도, 일상적 생활은 여전히 국지적 장소에 바탕을 두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물론 과거 폐쇄된 지역사회와는 달리 오늘날 지역은 지구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지역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을 더 이상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 지역에서 지구적으로 떠도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들이 서로 접촉하면서 혼합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들 간 그리고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 물리적, 사회적 교류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상호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가 발달하게 되었다. 카스텔(Castells, 1996: 11)은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적 원칙에 따라 저항적 또는 방어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실제 사람들은 정체성을 공동체적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자기보호적으로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정체성은 축소지향적이라기보다 확장지향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네트워크 사회에서 어떤 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연계된 다른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확장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국지적 정체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에 걸쳐 네트워크화된 것, 따라서 지구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초국적 이주자의 정체성은 지구-지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네트워크화된 정체성은 또한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의 정체성으로 다규모화된다. 지구-지방화된 사회라고 할지라도 국가적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도, 국민국가는 느슨해진 영토적 경계를 공고히 하면서 국가적 정체성의 붕괴 또는 약화를 막기 위하여 전통적 담론이나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는 주류 정체성의 정치를 강구한다. 이러한 네트워크화, 다규모화된 정체성 안에서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요소들은 서로 조화/갈등을 이루면서 관련적으로 변화한다. 때로 국가적 정체성과 지구-지방적 정체성이 대립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대안적 정체성 정치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소-기반적 정체성, 특히 인종, 성, 종교, 계급적 차이와 중첩된 정체성은 진보적인 정치적 동원과 반작용적 배타적 정치 양자 모두를 위한 가장 보편적 기반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된다(Harvey, 1993: 4). 소수 이주자 집단들이 추구하는 지방적 정체성의 진보성 또는 진보 정치는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상호 의사소통과 적극적 참여를 추구하며 또한 이를 통해 형성된다. 나아가 지방-지구적 정체성의 정치는 기존의 국가적 정체성에 저항하여 변화시키면서, 국지적 시민성의 확보와 더불어 국가적 시민성의 요구로 나아가게 된다.

<그림 1> 일본 정체성의 변화에서 상호관계



### 3) 일본의 다문화 정체성에 관한 연구 동향

다문화 사회에서 정체성은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공간적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변화하며, 또한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해 다규모적으로 형성·변화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살펴보면, 일본 다문화사회의 정체성 재구성 과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으로 이주하여 지역 사회에 정착하게 된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과 기존 일본인 원주민들의 정체성의 상호관계적 변화라는 한 측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적으로 공생하게 된 외국인 이주자들과 일본인 원주민들 간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된 지구-지방적 정체성과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의 (보수적) 지배권력이 암묵적 또는 노골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동질성의 국가적 정체성 간 다규모적 변화라는 또 다른 측면으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이와 같은 정체성의 상호관계적, 다규모적 재구성과정은 물론 한 개인이나 집단 내에서도 정체성이 다양함을 전제로 한다.<sup>1)</sup>

1)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소수자들에 관한 많은 논의들에서 빠져 있는 주요 요소는 정체성 구성에 있어 개인적 선택의 역할”이라는 점이 주장되기도 한다 (Burgess, 2008). 이러한 주장은 외국인 이주자의 정체성 (재)형성에 있어 개인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 또는 인종적 소수 집단들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및 다문화공생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물로 Douglass와 Roberts(200)는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을 고찰한 논문들을 편집하였으며, Weiner(1997/2009)에 편집된 논문들은 ‘동질성의 환상’을 지적하고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종적 소수자들, 즉 아이누(Ainu), 혼혈 일본인, 부락민(Burakumin), 흑인, 중국인 뉴커머, 재일코리언, 오키나와인, 브라질계 일본인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을 고찰한다. Graburn 등(2008)도 유사하게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 예로 외국인 임원, 국제결혼 여성, 브라질출신 일계인, 한국조선인, 미등록(불법)체류자, 흑인, 부락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중국 및 베트남 자녀 등의 사회문화적 삶을 다루고 있다.

직접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을 다룬 연구로는 Murphy-Shigematsu (2004)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일본에 정주하게 된 외국인 이주자들의 생활 사례를 고찰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이 다양한 정치적, 법적,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심리적 힘과 제약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집단별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들을 고찰하고 있다. 국내 연구로 한영혜(2006)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을 다양한 출신 및 제도적 조건들(즉 중국 귀국자, 남미 출신의 일계인, 국제결혼한 일본인 여성의 자녀, 귀화자, 재일한국조선인 등)에 따라 구분하여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보다 최근 권숙인(2010)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을 통해 고찰한 논문들을 편집하였다.

---

주의적 또는 행태주의적 요소를 강조한다기보다는 한 개인일지라도 단일한 정체성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재일한인의 국적과 아이덴티티

<표 2> 재일의 적응방식과 아이덴티티

민족 이념	모국지향 (재일조선인)	탈민족 (재일)	일본지향 (귀화일본인)	적응 방식	삶의 유형	아이덴 티티	아이덴티티 유형
남한 지향	한국국적 (민단계)	공생지향 개인지향 (제3의 길) 소수자운동	한국계 일본인	동화	숨기기 (은폐형)	동화 지향	귀화지향형
탈이념	조선적 (조국의 조선인)		조선반도계 일본인				차이화
북한 지향	북한국적, (조선적, 총련계)		북한계 일본인	즐기기 (창조형)	민족 지향	동포지향형 공생지향형 조국지향형	

자료: 原尻英樹(1989: 95); 전형권(2007: 123)에서 수정 자료: 김현선(2009: 326).

재인용

이러한 일본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은 인종이나 국적 또는 제도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인종 집단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대표적 연구들은 특히 재일 한국조선인들 내부의 정체성 스펙트럼을 고찰한 사례들로, 예로 하리지리(原尻英樹, 1989; 2006)는 이들의 정체성을 민족경계와 이념경계를 두 축으로 하여, 전자의 축을 모국지향, 탈민족, 일본지향으로, 후자의 축을 남한, 탈이념, 북한지향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따라 전형권(2007)도 최근 일본 정치의 보수화 경향에 따라 재일한인의 국적과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구분하고 있다(<표 1>).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후쿠오카(福岡安則, 1998; 2001)는 재일 한국조선인의 정체성을 귀화지향, 동포지향, 공생지향, 조국지향 등으로 구분했으며, 김현선(2009)은 재일 한국조선인의 적응방식을 동화/차이화, 삶의 유형을 숨기기(은폐형), 나오기(커밍아웃형), 즐기기(창조형)으로 구분하고 후쿠오카가 구분한 정체성의 유형과 비교하고 있다(<표 2>).

다른 한편, 일본 외국인 이주자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장소 또는 지역 사회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는 조현미(2003; 2009)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한 조현미(2003)의 연구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주민으로서 한일 양 민족의 상호인과 대응방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일본의 내셔널리즘의 변화양상까지도 추측”하고자 한다. 현장 답사에 근거한 조현미(2009)의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밀집지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최근 이주자 소수집단들 끼리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면서 지자체의 행정방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외국인 이주자에 관한 지자체의 지원 활동과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한승미(2003; 2010)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정체성과 관련한 혁신 지자체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아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일본의 지역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 まちづくり)운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인들의 전통적 정체성과 다문화사회로의 도래에 따른 이의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일본의 단일민족·단일문화를 강조하는 담론을 이른바 ‘동질성의 신화’라고 비판하고 있다(Burgess, 2004; Onuki, 2004). 이러한 동질성 비판은 일본인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인론’에 관한 재검토에까지 소급된다(Lie, 2004). 일본인론에 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이의 수정과 재비판에 관한 연구는 박용구(2005)에서 정리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인론의 수정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간인(間人)주의’ 또는 ‘관계체(關係體)주의’에 관한 연구는 백은경(2001), 박용구·신수진(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인주의’가 생활공간에 기반을 둔 정체성의 상호관계적 구성을 설명하는 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유의한 설명틀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전형권(2007)의 연구는 “일본의 ‘정체성 정치’에 내장된 이방인 억압기제를 분석”하면서, 일본이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보수적) 지배권력이 일본인론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일본 외국인 이주자의 다규모적 정체성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은 다양한 혈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며, 이에 따라 서로 상당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다. 이들의 정체성은 유형별 집단 내에서도 개인이나 세부 집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집단들이 가지는 정체성의 일반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이의 형성을 조건지우는 두 가지 축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표 3>). 여기서 설정된 두 가지 축은 인종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혈연과 문화적, 지리적으로 형성된 생활문화로, 이들은 각각 국가적(민족적/탈민족적) 정체성과 지역적(지방적/탈지방적) 정체성의 (재)형성과 관련된다.

한 축을 형성하는 혈연관계는 인종적 특성에 따른 정체성을 규정하지만, 개인이나 집단들이 동일한 혈연을 가질지라도 이들이 상호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주류 집단에서 분리되었으며, 또 분리된 후 어떤 지리적 환경 속에서 살아 왔는가에 따라 상이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혈연관계는 기본적으로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구축된 국민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흔히 우선적인 통합 대상이 된다. 즉 국가는 혈연관계에 우선적인 기준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집단들에 대한 정책을 차별화하며, 나아가 혈연관계를 이데올로기화한 민족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국가적 정체성을 구축·유지하고자 한다. 다른 한 축을 형성하는 생활

<표 3> 일본 외국인 이주자들의 다규모적 정체성의 유형화

구분		민족적(혈연) 정체성	
		일본계 ←	→ 비일본계
		(국가적 정체성)	(탈국가적 정체성)
지역적 (생활문화) 정체성	정착지향: (지방적 정체성)	⇔ 결혼이주자	
	↓	중국 귀국자	재일 한국조선인
	귀국지향: (탈지방적 정체성)	남미 일계인	동남아 이주노동자

문화는 기본적으로 장소에 바탕을 둔 생활과정 속에서 가지는 지향성(즉 정착/귀국지향)에 따라 형성되지만, 비슷한 생활문화를 영위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가지는 혈연관계와 국가 정책에 따라 차별화된다. 원주민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변화하는 이러한 생활문화는 기본적으로 이주자 개인의 자아정체성이나 지역 정체성을 좌우한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혈연관계 및 생활문화에 따라 상호관련적 및 다규모적으로 (재)구성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의 유형화에 바탕을 두고,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일본인을 배우자로 한 국제결혼은 2000년대 이후 대체로 연 3.5만 건을 상회하며 일본 전체 결혼건수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건수가 80% 정도이다. 2009년의 경우 일본에서 국제결혼의 건수는 다소 줄어 34,393건으로, 일본인 남성이 77.8%이고, 그 배우자는 중국(34.7%), 필리핀(21.5%), 한국조선인(15.4%), 태국(4.5%) 순으로 3/4 이상이 동아시아 출신 여성이다. 과거에 비해 국제결혼이 증대함에 따라, “오늘날 일본인 남성, 심지어 엘리트 붐급생활 남성들과 필리핀 여성 간 결혼은 일본사회에서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일상이 되었다”(Yamashita, 2008: 108). 이와 같이 국제결혼이 증가한 것은 일본 여성들이 결혼 연령을 늦추거나 결혼 자체를 기피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의 도시 유출로 인해 적령기 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수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국제결혼은 배우자의 젠더 및 국적에 심각한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다.

결혼이주자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인 배우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2) 일본 내에는 19세기 이전부터 일본에 통합되었지만 인종·문화적 차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아이누족이나 오키나와인들이 있으며, 이들도 흔히 일본의 소수인종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에 관한 연구는 제외한다.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본인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즉 이들은 국적이 아니라 우선 주거공간에 기반을 두고 그들의 가족 및 이웃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환영 받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의 실행과정에서 결혼이주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인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일본 결혼이주자들은 일본 가정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국지적 환경에 거의 완전히 동화되거나 또 다른 일부는 동화를 거부하고 때로 갈등을 유발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계산된 순응의 실천 전략에 따라 동화와 비동화 양 극단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Burgess, 2008: 76). 즉 결혼이주자를 받아들인 일본인 가족들은 완전한 동화를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아니며, 이들을 받아들인 지역의 문화와 생활양식의 체득이 일방적으로 동화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지역사회에서 결혼이주자들은 일본인 가족 및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자아 및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지만, 이는 필수적으로 자신이 본국에서 가졌던 문화적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국가적 정체성은 다소 모호하다. 즉 Burgess(2008)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일본인과 비일본인 간 경계의 벽이 크게 완화되었지만, 국제결혼이 일본인과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일본의 결혼이주자들은 일정 기간(대체로 5년 이상) 체류하면 일본 국적을 획득하거나 영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결혼이주자들에 대해 사회복지 수혜 대상을 계층화하고 있다. 즉 수혜대상의 조건이나 자격에서 우선 순위를 가지는 집단은 영주나 귀화 등을 통해 일본 국적을 완전히 취득한 사람, 두 번째 순위는 재일한국조선인과 일제인 등과 같은 영주자와 정주자, 그리고 입관법에 근거하여 연수기능실습생으로 정규 입국한 이주자 순이며, 입관법에 위반되는 비정규 입국자나 불법체류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Kibe, 2006). 일

본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은 결혼의 생애사적 의미로 보면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일본적 국가정체성을 가지게 되겠지만, 일본 정부의 차별화는 결혼이주자들의 국가적 정체성을 유형별로 달리 형성되도록 하는 주요 배경이 될 수 있다.

결혼이주자들과 배경은 전혀 다르지만 지역사회에 영구 정착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이주자 유형으로 중국귀국자를 들 수 있다. 중국귀국자란 중국 잔류 일본인과 그 가족들이 일본으로 이주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동안 중국 동북부지방으로 이주했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1958년 일본 정부에 의한 본국 송환의 중단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2년 중국과 일본 간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특히 1981년 이들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시작된 이후 귀국하게 되었다. 1945년까지 만주지방으로 이주한 일본인은 약 32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생존한 사람과 그들의 배우자 및 후손들은 약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Tai, 2009: 147). 일본 정부와 대중매체는 이들을 중국잔류자(부인 또는 고아)로 지칭하면서 전쟁희생자로 인식하지만, 이들의 배우자는 대부분 중국인이고 그 후손들도 거의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식 생활문화에 익숙한 중국인으로 간주된다(Goodman, 2003).

중국귀국자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은 시기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80년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인 1세로 일본 내 이들과 연고를 가진 가족이나 친족의 신원보증을 통해 입국했고 이들에 의존하여 출신지 부근에 정착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들어온 중국귀국자들의 네트워크에 의존하면서 중국귀국자 집주지역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사회에 포섭되기보다는 소수집단을 구성하면서 다른 뉴커머 외국인들과 유사하게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빈곤상태로 생활하고 있다(한영혜, 2006: 163). 특히 1990년대 이후 귀국한 이들은 일본어를 거의 할 기회가 없고,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누가 와도 절대 대답을 하지 않고 문도 안 열어’ 줄 정도로 고립된 생활을 하며, 취직 지원도 거의 전무하여 다수가 생활보호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일본인이며 중국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따라서 일본의 지역 사회에 영구 정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어느 쪽에 정주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이라는 답과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답이 반반일 정도로 이들의 정체성은 이중적이다(淺野愼一·修岩, 2010: 216).

중국귀국자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는 데에는 이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에 상당 정도 기인한다. 일본 정부는 중국잔류자들의 영주 귀국에 대해 복잡한 신청절차를 밟도록 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수집, 서류작성, 교통통신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했고, 특히 일본 거주 친척의 신원보증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귀국 후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도 이들은 일본 사회에 복귀한 일본인으로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에 부담을 주는 ‘생활수급자’의 일부로 분류되어 감시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淺野愼一·修岩, 2010: 219). 이로 인해 이들은 2001년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운동을 시작하였고, 2004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소하여 일본 국민으로서 기본적 생활과 권리를 회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귀국자들을 일본 국적에 통합시키고자 하지만 단지 ‘이등국민’ 또는 ‘타자’로서 주변부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귀국자와 같이 혈통으로는 일본계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대표적으로 브라질)에서 이주해 온 일계인(니케이, *Nikkei*)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80년대 말 입관법의 개정으로 정주자로 인정됨에 따라, 1990년대에 매년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1991년 한 해 동안 8만 명)이 입국하여, 일본 내 부족한 단순 노동인력을 보충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남미 일계인의 유입은 처음에는 이민 1세와 이중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그 이후 일계인 2세, 3세들에게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후 매년 갱신가능한 친족 방문비자를 바꾸도록 했다. 초기 이주자들은 대부분 일본으로

의 ‘귀환의 꿈’을 가지고 있던 1세들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체득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이후 이주한 일계인들은 남미 국가들 출신이며 배우자들도 대부분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일본어나 일본문화를 체득할 기회가 없었다.

남미 국가에서 이주한 일계인들은 주로 도쿄 주변이나 그 외 공업지역, 예로 요코하마(橫濱), 도요타(豊田), 하마마츠(浜松), 오이즈미(大泉) 등에 집중 거주하면서, 이들의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대단지 집주지역에서는 언어 소통의 장벽이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일본인 거주자들과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에스닉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일본인과의 ‘공생’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로, ‘일본 전체에서 가장 브라질적인 도시’라고 불리는 군마현 오이즈미의 경우, “지역주민들은 이들의 출현을 인정했지만 대체로 무시한 반면, 니케이진도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해 똑같은 무관심 속에서 ‘브라질적 생활양식’을 재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Carvalho, 2003: 201).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적극 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특히 “소규모 단지에서 ‘지역공생’의 실현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예로 시즈오카(静岡)현 이와타(磐田)시의 경우, 소규모 공영단지를 무대로 자치회를 중심으로 일본인 주민들과 브라질인 주민들, 그리고 지자체, 학교, 기업 등 로컬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각 행위자들 간 관계의 재편을 통해 공생을 향한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逄戸一郎, 2010).<sup>3)</sup>

3) 특히 이 지역의 자치회에서는 ‘외국인과의 지역 공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 “외국인 촌을 만들면 안 된다. 또한 외국인 배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해를 얻어가면서 공생을 진전시켜, ‘외국인과 얼굴이 보이는 관계’ 만들기를 진행한다”(3조), “외국인에게 살기 좋은 마을은 지역주민에게도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지역만들기를 진전시킨다”(4조) 등 공생적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외국인/지역민’이라는 이항대립적 발상을 넘어서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과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반-분리주의(anti-segregation)의 자세를 명확히 엿볼 수 있다”으로 주장한다

남미 일계인들은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점차 장소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언젠가 귀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혈통적 ‘모국’에서 경험하는 배제와 타자화 경험, 초국적 연결망의 유지 등 ‘귀환’을 매개로 혈통과 국적, 체득된 문화와 새로운 일상생활이 교차하는 맥락에서 정체성과 소속감의 혼란과 불안정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이 일본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수혜 정책이 있어서도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귀화 및 결혼이주자나 재일한국조선인들, 심지어 중국출신 전문직 이주자들에 비해 차별적이다(Takenoshita, 2006). 예로 지난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본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긴급 프로그램을 발동, 브라질 등 남미 계열 노동자들에게 비행기 값 3000달러와 추가 2000달러 등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뉴욕타임즈》; 《머니투데이》, 2009.4.23.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일계인들은 비록 일본 혈통을 가지고 일본의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장소 정체성이나 일본에 소속감을 느끼는 국가 정체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하겠다.

재일 한국조선인은 중국귀국자와 남미 일계인들과는 달리 일본 혈통을 가지지 않지만 일본 사회에 상당 정도 오랜 생존과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일본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이들의 상당 부분은 일제 강점기 동안 한반도에서 일본에 이주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올드커머이며, 1970년대 이후 일본으로 이주해온 뉴커머들도 일부 포함한다. 재일 한국조선인은 2000년 약 63.6만 명으로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37.7%)을 차지했으나, 2009년에는 58.2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감소했고 그 구성비도 26.6%로 줄어서 중국 출신 외국인의 수와 구성비

(途戶一郎, 2010: 279~280).

다 적게 되었다.

재일 한국조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상당정도 오랜 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완전히 배타적인 에스닉 커뮤니티를 구성하기보다는 일본인 주민들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구들을 형성하고 있다. 예로, 오사카(大阪)시의 이쿠노(生野)지역에 위치한 코리아타운은 이들이 집주한 대표적 지역으로,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한국식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다. 과거 코리아타운은 주로 이 지역에 집주한 한국조선인들에게 전통음식과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이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거나 여가생활을 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일본과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확대되는 한편, 일본 내 다문화주의 붐과 월드컵 공동개최, 한국 대중문화의 전파에 따른 한류 붐 속에서 코리아타운은 단지 올드커머 재일한국조선인들만의 시장이 아니라 국적과 민족의 경계를 넘는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권숙인, 2010). 이에 따라 재일한국조선인의 정체성도 변하여, 과거 피식민지적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차별 속에서 지역사회 정착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보다 개방적이고 한국 사회와도 네트워크를 확충한 초국적 정체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조선인들은 공통적으로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및 세계의 변화에 따라 초국적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적응방식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다양한 유형들(예로 은폐형, 커밍아웃형, 창조형 등)로 구분된다(김현선, 2009).

다른 한편 1990년대 이후 재일 한국조선인들 가운데 귀화나 일본인과의 결혼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국가적 정체성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과거 재일 한국조선인의 국가 정체성은 이념과 민족을 두 축으로 다양한 유형들(예로 모국지향/일본지향/탈민족, 남한지향/북한지향/탈이념)로 구분되었지만(原尻英樹, 1989; 2006), 최근에는 일본 정치의 보수화 경향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정체성의 스펙트럼이 분화되고 있다(전형권, 2007). 특히 후쿠오카(福岡安則, 1998; 2001)는 재일 한국조선인의 정체성을

귀화지향, 동포지향, 공생지향, 조국지향 등으로 구분했다. 뿐만 아니라 제일 한국조선인들 가운데 개인적 이유로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한국조선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점은 제일 한국조선인이 귀화 이후에도 한국식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다(한영혜, 2008). 과거 제일한국조선인들 가운데 일부는 나뉠의 이유로 본명(민족명)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2, 3세대들 가운데 민족명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은 지역사회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일본계 혈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의 체득에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외국인 이주자 집단으로 동남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이주노동자를 비자 유형별로 구분하면, 앞서 논의한 정주비자를 가진 남미 일계인, 취업사증을 소지한 전문기술직 노동자(홍행목적의 비자도 흔히 이 유형으로 분류됨), 그리고 ‘연수’를 명분으로 한 연수·기능실습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연수기능실습생들은 대부분 동남아 출신으로, 2000년 36,199명(전체 외국인 등록자 가운데 2.1%)이었으나 그 후 크게 증가하여 65,209명(3.0%)에 달하게 되었다. 이들은 한정된 기간 동안(1년간 교육 이후 2년간 현장 실무 연수) 일본에 체류하면서 노동을 한 대가로 임금을 받고,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되어 있다.<sup>4)</sup> 이들은 직장에서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거의 전담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장시간 노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있다.

동남아 출신 단순 이주노동자들은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대부분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이동은 물론이고 거주지 선정이나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활동도 상대적으로 엄격히 제약되고

4) 그 외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서 파트타임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학비자 이주자도 2000년 37,781명(2.2%)에서 2009년 46,759명(2.1%)로 그 수가 증가했다. 또한 미등록(즉 불법잔류) 이주노동자의 수는 1990년대 중반 30만 명에 육박했으나 그 이후 규제 강화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15만 명 정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본인들과의 직접 접촉을 꺼리고, 지역사회의 공적 공간에 모습을 잘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반면 이들은 지역 내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지라도 자국인들과 본국에 있는 가족·친지들과 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Ball and Piper, 2002). 이로 인해 이들은 일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지만, 일본 내 자국인들이나 또는 본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지역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양자 모두를 거의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또 다른 이유에서 일본의 지역사회나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 사례는 중국인 뉴커머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과 자국 내 고용 및 소득 기회의 증대로,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일본 지역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생각이 별로 없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원한다. 즉 이들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지역에서 보다 원활한 정주생활을 바라지만, 일본 사회에 통합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Bail, 2005). 즉 “일본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중국에 있는 그들의 가정과 연계를 결코 단절하지 않으며, 그들 자신을 일본 ‘이주자’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지리적인 근접성과 초국적 경제에 뿌리를 두고, 일본 사회의 주변에 위치하지만, 중국인들은 고용경력이나 일상생활 그리고 자기 정체성 등 모든 면에서 초국가적 지향성을 보인다”(Liu-Farrer, 2009: 123).

일본 정부는 이러한 단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의 유입 증가와 이들에 대한 국내 수요의 확대에 일본 정부는 1982년 기술연수생 제도의 도입, 1989년 외국인 연수제도의 확충을 위한 입관법 개정, 그리고 2000년대에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제도화 등을 추진하면서 이들에 대한 포용정책을 조금씩 확대해 왔으나,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교체순환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들을 영구 정착할 이민자가 아니라 일본에 일정 기간 취업한 후 본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즉 이주노동자들은 일본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할 뿐,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은 처음부터 제한된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본국 귀환을 전제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생활에서 자의적/타의적으로 배제되면서 지역적 정체성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제약에 의해 구조적으로 (또는 보다 최근 의도적으로)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 4. 지자체와 지역단체들의 활동에 함의된 정체성

외국인 이주자의 대규모적 정체성은 이들이 정착하면서 직접 접하게 되는 원주민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단체들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나아가 국가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에 의해 상호관련적으로 재구성된다. 특히 초국적 이주는 특정 도시나 지역에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체성의 정치화는 흔히 국지적 조건과 필요에 의해 동기화된 집단들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의 정체성 재구성에 관한 논의는 이들을 지원(또는 규제)하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지자체의 대응과 지역사회단체들의 성향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착 생활 및 정체성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는 지역적 차원에 더 많이 주목하도록 요구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은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지만, 개별 지역이나 도시,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이 집중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들은 이들의 유입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들과 일본 원주민간의 갈등 해소,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복지 제공,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수용 방식 등에 관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일부 지자체들은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지역 공동체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의 입안·시행은 혁신적 성향을 가

진 지자체들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의 혁신지자체들은 대체로 1960년대 외생적 지역개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즉 1960년대 일본에서는 국가와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면서, 지자체는 그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주민의 생활과 복지보다는 국가 차원의 경제 개발이 우선시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개발의 근원적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에 종속된 지역 행정을 부정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주민운동을 전개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러한 주민운동과 이들의 입장을 수용한 노동조합(특히 공무원노조)운동, 그리고 이에 참여한 혁신정당이 서로 유연하게 연대한 지역연합을 결성함으로써, 이른바 ‘혁신 지자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혁신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체제 내로 통합하고 시민의 욕구를 정책적으로 집약하여 정체체제 내로 환원시켰으며, 특히 국가가 수행하지 못한 복지 기능을 담당하였다(김장권, 1993; 김찬호, 2000).

그러나 혁신지자체들은 1970년대 들어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와 더불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혁신지자체들은 사회변동과 전반적 도시화에 조응하는 산업도시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또한 지자체와 주민들이 자신의 입장과 역할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데 미숙했다. 더욱이나 1980년대 들어, 일본의 도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보수주의적 민영화’에 기반을 둔 ‘도시경영론’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도시들은 도시의 산업기반 붕괴와 인구의 공동화, 지역관리 기능의 저하 등으로 도시경제의 침체와 지역사회 활력의 상실을 겪게 되면서, 지역사회운동과 지자체의 성향이 새롭게 변화하게 되었다. 즉 “스스로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공간을 자율적으로 조성해 가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풀 수 없는 과제들이 점점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변화도 함께 맞물려 변했으며, “바로 이런 맥락에서 — ‘마을 만들기’형 주민운동”, 즉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김찬호, 2000). 이러한 마을만들기 운동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나 지역이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

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산업 기반을 재구축하고 공공서비스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생활공간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sup>5)</sup> 특히 이 운동은 지역공간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지역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사회공간적 의식 변화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혁신지자체의 전통과 1990년대 이후 새롭게 전개된 마을만들기 운동은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단체들의 활동에 있어 주요한 배경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지자체들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된 주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된다(Pak, 2000: 245). 첫째, 지방공무원들은 지방정부에 의해 자율적 정책 혁신의 목표로 설정된 많은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공무원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외국인 이주자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즉 중앙공무원들은 이들을 입국과 출국의 통계를 위한 공식적 절차로 이들을 접하지만, 지방공무원들은 이들을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둘째 정책 입안의 역사에서 과거 1960~1970년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도 더 많이 환경과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졌던 진보적 성향이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에 되살아나게 되었다. 즉 국가적 정책 의제로 설정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가 필요하면 이들을 스스로 혁신 정책의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셋째, 세계적 변화로서 지구화 과정 및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적 차원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실제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적용하게 되었다. 즉 도시의 지방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국제화 정책을 지역사회의 정책 혁신을 위한 기회로 포착하고, 내향적 국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내향적 국제화 개념에 기초한 지자체들의 외국인

5) 그러나 실제 “일본의 자치모델은 몇몇 도시지역에서 혁신자치단체를 성립시킨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농산촌 지역에서는 이념적으로 풀뿌리 보수주의로 흔히 표현되며, 그것은 경제중심주의적인 지역활성화 운동으로 특징지어진다”(정근식, 1999: 84~85).

이주자 지원 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문화공생’의 개념에 따라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들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들은 지방정부의 창조적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정당 정치의 중요성, 특히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의 성향을 강조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특정한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지방선거의 요구나 단체장의 성향과 무관하게, 외국인 이주자들이 밀집한 지역의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실 외국인 이주자들이 부족한 지역 노동시장을 충원하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본인 원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리고/또는 이들이 낯선 국가와 지역에 이주하여 겪는 고통을 가능한 줄이고 이들 역시 인간으로서 보편적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입안과 시행은 실제 진보/보수의 이념적 성향을 능가하는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유입과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국제협력 활동을 해 온 NGO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 온 시민단체들이 지자체의 주요한 사업 파트너로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지역사회단체들과 지자체간 관계는 일관되게 협력적이라기보다는 단체의 성향에 따라 협력적이거나 비판적이기도 하다.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단체들(NGOs)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Roberts, 2000). 첫째 유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단체로,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회비와 자원봉사를 통해 외국인 이주자 지원 활동을 전개하지만, 때로 기업, 지방정부, 여타 재단이나 단체들(종교단체 포함)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예로 의료보전, 가족관계, 교육, 주거, 이주 지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모국에서의 재정착 문제 등의 해결에 관심을 가진다. 또 다른 유형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노조들의 지원 활동으로, 회비와 성공 사례를 통한 수입 그리고 때로 전국 노조의 지원으로 활동한다. 이 단체들은 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문제 해결과 인권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기준법의 준수 또는 적용을 강조한다. 물론 이 두 유형의 단체들은 내적으로 보다 세분된 성향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 구분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최병두, 2010). 외국인 이주자들이 유형별로 상당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처럼,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단체들의 활동과 목표, 이에 함의된 정체성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를 위해 오사카시와 히로시마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 지원단체들의 사례 조사에 근거하여 이들의 활동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sup>6)</sup> 이들의 성향과 정체성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일본인 주민들에 의해 결성된 외국인 이주자 지원단체들의 성향을 살펴 보면, 오사카시의 비노조 지역사회단체인 ‘클로버(くろば)’의 경우, 주로 결혼이주자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언어(통역) 지원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지자체, 법원 등)과 상당히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명시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다고 여성지향(페미니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오사카시 비노조 지역사회단체인 ‘링크(RINK)’는 주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주요 활동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체의 내적을 랑에 더 많이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단체는 이름(RINK: Rights of Immigrants Network in Kansai)에서 표방된 것처럼 인권지향(휴머니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 노조조직인 ‘스크램 유니온·히로시마’(スクラムユニオン・ひろしま)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개별 피해자 권익 구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기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6) 이 지역들의 답사는 2008년 2월 21~24일과 3월 14~17일에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최병두(2010) 참조.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개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지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히로시마연대 유니온(廣島連帯ユニオン) 역시 지역 노조조직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권 쟁취를 위한 제도 변화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비단 일본인 원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사례뿐만 아니라 이주자 자신들에 의해 자조적으로 구성된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일본 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한 기간이 오래된 재일 한국조선인들의 경우 매우 다양한 유형의 단체들을

<표 4> 일본인 주민들에 의해 결성된 외국인 이주자 지원단체들의 성향

단체명칭	클로버 (くろーば)	링크 (RINK)	스크램 유니온· 히로시마(スクラムユニオン・ひろしま)	히로시마연대 유니온(廣島連帯 ユニオン)
목적 성향	협력과 보완 <-----> 비판과 대안			
정체성 유형	여성지향 (페미니즘)	인권지향 (휴머니즘)	노동권지향 (개별적)	노동권지향 (구조적)
활동 영역	(결혼이주자 여성) 상담 및 언어 (통역) 지원	(이주노동자와 가족) 상담 및 정보 제공	(이주노동자) 개별 피해자 권익 구제 중심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제도 변화

주: 이 분류는 각 단체들의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대표자 또는 면담대상자의 성향에 근거를 두고 구분한 것이다.

<표 5> 재일 한국조선인에 의해 결성된 지역사회단체들의 성향

단체명칭	平和統一(家庭)聯合 제9연합회(통일교회 히로시마지부)	돗가비어린이회 (トッカピ子ども會)	코리아 엔지오 (코리아(Korea) NGO)	히로시마한국·조선사 회연구회(廣島韓國· 朝鮮社會研究會)
목적 성향	동화 <-----> 차이화			
정체성 유형	결혼지향	공생지향	동포지향	조국지향
활동 유형	숨기기 (은폐형)	드러내기 (커밍아웃형)	드러내기 (커밍아웃형)	즐기기 (창조형)

주: <표 4>와 같음.

구성하여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출신의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제일 한국조선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후쿠오카(福岡安則, 1998; 2001)와 김현선(2009)의 유형분류를 참조하여 4가지 유형, 즉 결혼지향, 공생지향, 동포지향, 조국지향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표 5>). 平和統一(家庭)聯合 제9연합회(통일교회히로시마지부)의 경우는 특정 종교를 매개로 맺어진 결혼이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해당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폐쇄된 활동을 하면서, 대체로 일본 사회에의 동화를 전제로 자조적 교류 모임을 하고 있다. 오사카부 야호(八尾)지역에서 제일동포를 중심으로 조직된 돛가비어린이회(トッカピ子ども會)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거주하는 한국조선인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난민이나 중국 출신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의 활동 및 정체성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어서 상호 협력 하에 이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공생지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오사카시에 제일 한국조선인들로 구성된 코리아 엔지오(フリア[Korea] NGO)는 제일 코리아인의 민족교육권 확립과 다민족다문화공생 사회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의 활동 유형 역시 드러내기(커밍아웃)형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이 단체의 정체성은 공생과 더불어 동포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 교수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히로시마한국·조선사회연구회(廣島韓國·朝鮮社會研究會)는 제일 한국조선사회의 형성 및 변천과 인권·복지·교육 문제 등을 연구하면서, 글로벌 휴머니즘의 입장을 표방한다. 이들의 활동은 드러내기의 수준을 넘어서 창조적 즐기기형으로 간주되며, 탈일본의 범아시아적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지만 다른 유형의 이주자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조국지향형을 띄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성향(즉 정체성)을 가진 지역사회단체들의 활동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원주민들과 지자체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예로 위에서 언급한 오사카부 야호(八尾)시의 돛가비어린이회는 지자체의 지

<그림 2> 오사카 아오시(大阪府 八尾市) 八尾國際交流野遊際의 다양한 행사들(2007.10.30)



자료: 톱카피子ども會 제공

원과 협력 하에 지역의 재일 한국조선인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출신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예로 일본어교육, 통번역 상담, 중국 및 베트남 모국어 교실, 여타 자기계발 및 각종 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활동에는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아오시 국제교류야유회(八尾國際交流野遊際)도 포함되며, 이 야유회는 고유한 전통 춤과 음식의 교류의 장일 뿐만 아니라 의류의 재활용에서 나아가 외국군 철수와 자위대 파병반대 캠페인까지 전개하고 있다(<그림 2>). 이 단체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환경운동이나 국제 평화운동을 선도하면서,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오래된 지역사회 문제인 ‘동화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외국인 이주자들의 인권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전개하는 조례와 정책을 시행하도록 추동하고 있다(조현미, 2009).<sup>7)</sup>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된 지역들을 중심

7) 일본의 근대 이후 계급제도의 해체에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잔존한 천민집단의 문제를 동화문제라고 하며 이들 집단이 특정하게 거주하도록 지정된 지역을 동화지구라고 한다. 즉 “동화지구는 공식적으로 행해졌던 특정 계층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배제로 인해 형성된 거주지 분리지역”을 의미한다(조현미, 2009: 808).

으로 해당 지자체들과 지역사회단체들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론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단체들의 성향이 다양한 것처럼, 지자체들 사이에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자체에 따라 이의 입안·시행의 강도와 성향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로, Pak(2000)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 철강이 자리 잡고 있어 1920년대부터 이미 한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가와사키시의 경우 국제화에 매우 적극적이고 포용 프로그램의 폭도 넓은 반면,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가와구치(川口)시는 국제화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이들의 포용 프로그램 폭도 상대적으로 매우 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들의 정책이 일반화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의 기본 취지를 왜곡시키는 경향도 발생하게 되었다. 예로 도쿄도의 경우, 다소 진보적이었던 전(前)도지사 스즈키(鈴木俊一)의 임기 동안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일본의 모습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새로운 다문화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도쿄도는 “일본 사회 내의 뿌리 깊은 사회운동의 전통이나 ‘인권’과 같이 세계화와 더불어 여러 국제기구에서 새로이 주창/강조되는 가치에 접목되어 이러한 개혁적 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보다 강한 일본’, ‘국제화 시대에 보다 앞선 도쿄도’라는 [민족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노동력 및 사회 경제력 전반에 걸친 국제경쟁력 비교에 있어서 일본이 이민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뒤지지 않고 우수한 인력의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매우 현실적인 필요에 근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적 사회개혁과는 거리가 먼 이시하라(石源愼太郎)도지사로 바뀌면서, “그가 말하는 ‘국제화’란 일본 지역사회 내에 다양성을 함양하면서 문화적 타자에 대한 관용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정통 일본’의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런 경향은 문화적 타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협적인 제도적 재정비로 이어져 도쿄도의 외국인 대표자회의가 완전히 해산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한승미, 2010: 263~264).

## 5. 일본의 전통적 국가 정체성과 정체성의 정치

한 국가의 국가적 정체성은 한편으로 그 국가의 구성원들 간 합의된 가치체계에 의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재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정체성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 국가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이나 담론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정체성(재)구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한 국가의 국가적 정체성을 간단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근대 국가는 복잡한 정치경제체제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이념이나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 역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어떠한 관점이나 측면에서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가의 국가적 정체성을 규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특이하게 일본은 근대 이후 단일인종·단일문화라는 단순한 국가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을 전제로 한 국민국가를 발전시키는 한편, 내적으로 아이누인과 오키나와인들을 인종적으로 포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한반도와 중국(특히 대만과 만주 등) 나아가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들을 침탈하고 식민지화시키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분명 다양한 문화들과 접하고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문화들을 배제하고자 했

다. 이러한 경향은 제2차 대전에서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 속에 내재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에서 과거 식민세력이며 침략자였던 일본이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국민국가로 재탄생한 반면, 식민주의와 파시즘의 희생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분산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Kang, 2001: 137). 일본의 이러한 국가적 정체성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력의 세계적 확대 과정에서 다시 표면화되고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지구화 과정 속에서 상품과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의 세계적 이동이 촉진되었으며, 특히 일본은 내적으로 저임금노동력의 부족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이주자들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과 지역사회 정착은 이들과 직접 문화적 교류를 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의 유입에 대한 국가 관리와 통제, 그리고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들과 지역사회단체들의 활동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일본인, 일본 지역사회, 일본 국가의 기존 정체성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인이 집중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내향적 국제화’, ‘다문화공생’ 등에 바탕을 둔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주민들이나 지자체 자체의 정책 방향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기존의 인종적·문화적 동질성을 포기하고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구하면서, 이에 따른 정체성의 대전환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흔히 일본인과 일본 국가의 전통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지칭하는 ‘일본인론(Nihonjinron)’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일본인론은 ‘일본 정체성에 관한 논의’라고 정의될 정도로 정체성이 그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에 관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일본에 특이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일본인론은 ‘일본인 집단주의’를 표방하는 민족주의 담론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Befu, 2001; 박용구, 2005).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인론은 일본의 근대화 시기인 18~19세기 형성된 인종에 관한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에 관한 담론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제2차 대전에서의 패전 이후 일본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상당 정도 억제되었으나, 1970~1980년대 일본의 경제 부흥기에 일본인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졌다. 물론 과거 제국주의와 관련되었던 사고로서 국기, 국가, 군주 등은 더 이상 강조되지 않았지만, 대중매체, 교육체계, 행정규제 등을 통한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체계적 홍보는 상당한 것으로 간주되었다(Burgess, 2008b).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침체로 일본인론에 관한 관심은 다소 진정되었지만, 다른 한편 외국인 이주자들의 증가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여러 담론과 정책들은 이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일본인론에 관한 검토 과정에서, 일부 연구자들(특히 일본사회를 연구하는 외국인 학자들은)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동질성에 대한 지배적 패러다임이 해체되고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이들은 “일본은 소수자들의 존재를 배제하는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에 관한 지배적 서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구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동질성의 신화’에 기반을 둔 ‘위험한’ 일본인론을 체계적으로 비판하거나 이와 관련된 담론에 직접 반대 입장을 표방하고 ‘다문화 일본’을 강조하기도 한다(예로, Weiner, 1997; Befu, 2001; Burgess, 2004; 2008b). 물론 이러한 입장은 일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도 공감되면서, 동질성의 신화를 추구하는 일본인론이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도록 한다(Kibe, 2006).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증대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일본인과 일본문화는 동질적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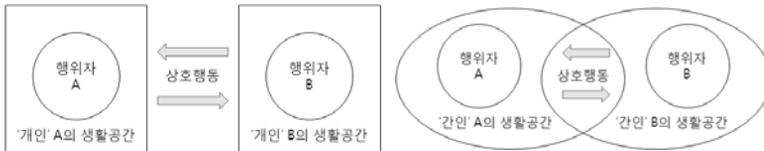
는 사고는 여전히 저변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점은 Befu(2001, 140; Burgess, 2004에서 재인용)의 주장, 즉 “오늘날 일본인론은 전쟁 중 일본인론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확고하게 뿌리를 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국가장치에 의해 핵심적으로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로부터 퍼져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일본인론에 관한 최근의 동향은 이와 같이 경제침체에 직면하여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된 일본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담론을 주도하는 집단은 대체로 보수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과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일본의 문화인류학자 아오키(青木保)는 일본인론을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결부하여 그 변화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를 전후 일본인 집단주의의 시발점으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일본인에게서 집단에 대한 충성이 중심적 가치이므로 일본인은 집단의 목표에 스스로 복종함으로써 특수한 심리적 만족을 얻는다”고 주장한다(박용구, 200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일본인 집단주의론에 대한 비판으로, 근대적 개인의 미확립으로 인해 개인이 집단에 전면적으로 몰입·예속됨으로써 일본인은 폐쇄적이고 국제화시대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재반론들 가운데 하나로, 서구 개인주의의 역기능을 오히려 비판하면서 일본인 집단주의론의 내용을 질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제기되었다.

이 시도는 간인주의(間人主義, contextualism) 또는 관계체주의라 불리는 이론으로, 하마구치(濱口惠俊, 1982)에 의해 처음 제시된 후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하마구치에 의하면, 일본인에게서 집단 속에서 개인의 의견을 강조하는 서구적 개인주의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유기적 상호관계를 항상 좋게 유지하려고 하는 소위 관여적(關與的) 주체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주체성을 ‘개인’과 대비하여 ‘간인’으로 명명한다.<sup>8)</sup>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을 의미하는 간인은 대인적 관계 속에서 연관성 그 자체를 자기 자신으로 의식하는 인간의 존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로 이해된다. 즉 ‘개인’은 각각에 독립된 행동 주체이지만 사회적으로 원자적 존재이고, 각 개체 간 상호작용은 각자의 생활공간 밖에서 위치하는 객체와 이루어진다. 그러나 ‘간인’은 사회적으로 분자적 존재로, 각 개체는 분자 간 결합과 같이 양자 간 상호작용을 공통으로 소유하는 생활공간을 자기 시스템 내에 보유한다(<그림 3>). 여기서 ‘개인’ A와 B의 상호작용은 각각의 생활공간 밖에 위치하여 수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간인’ A와 B의 상호작용은 두 사람이 공유하는 생활공간 안에 위치하여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필수요소로 본질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박용구, 2005: 231~232).

<그림 3> 행위자 간 상호행동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와 간인주의의 차이  
 (가) 개인(the individual)의 상호행동      (나) 간인(the contextual)의 상호행동



자료: 백은경, 2001: 275; 박용구, 2005: 232에 근거하여 재구성.

생활공간의 공유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행동을 강조하는 간인주의는 개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이 주장이 일본인론의 한 변형으로 일본인 집단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아니라며, 그 자체로서 생활공간에 근거한 공동체이론으로 간

8) 간인주의를 관계체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 점에 기인한다. 즉 자신을 객체시(대상화)할 때 자기 자신만을 대상으로 삼는 개인주의에 대해, ‘자기와 타인의 연관성’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관계체주의라고 명명된다. 관계체주의는 연대적 자율성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 사회편성의 일반적 원리를 지칭. 관계체주의에서 말하는 관계란 한국적 감각으로는 ‘사이’, 일본적 감각으로는 ‘아이다가라’(間柄)에 대응시킬 수 있다(박용구·신수진, 2004).

주될 수 있다. 즉 하마구치 자신이 강조하는 것처럼, 일본인론은 조직이나 집단에 예속·몰입을 강조하는 집단주의가 아니라 서구적 개인주의와는 달리 상호의존주의, 상호신뢰주의, 대인관계의 본질시 등을 강조하는 이론(또는 이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일본적 집단주의’로 불렸던 간인주의는 국외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간인주의가 일본인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켜 일본인론을 거짓으로 무장한 이데올로기로 규정하려는” 시각도 있었다(박용구, 2005). 뿐만 아니라 실제 일본의 기층 문화에는 사람마다 자기가 소속한 조직을 중심으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간인주의의 생활태도가 생겨났다고 하지만, 하마구치 자신의 실증조사에서도 일본인의 간인도(間人度)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음이 밝혀졌다(백은경, 2001; 박용구·신수진, 2004).

이와 같이 이른바 간인주의는 일본인 집단주의 나아가 기존의 일본인론을 옹호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연구에서 나타난 방법론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만,<sup>9)</sup> 국가라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적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즉 앞선 논의에서 인용한 홀(Hall, 1990) 등에 의해 제시된 바와 같이, 정체성은 개인의 고유한 속성이라기보다 상호관계 속에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호주관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결과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어떤 통일된 (이에 따라 양자 간에만 배타적 이루어지는)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상호 인정하는 정체성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인주의가 일본인론의 한 변형으로 전락하여 배타적인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이데올로

9) 백은경(2001: 271)에 의하면, 간인주의에 내재된 방법론으로, 개인주의의 정의, 개인주의와 간인주의의 관계 해석, 개인주의의 사회와 간인주의 사회의 구분 방법, 간인이 내포하고 있는 관계성의 범위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기가 아니라 일본인 또는 일본 국가가 동질성의 신화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다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인들이 공유한 생활공간, 즉 이들에 의해 형성된 공적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도 중요하다. 실제 전후 일본의 공적 영역은 한편으로 성 차이에 기반한 가부장적 지배구조와 다른 한편으로 국적의 차이에 근거한 민족주의적 지배구조에 따라 배타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Kang, 2001). 외국인 이주자들의 증가는 이러한 배타적 생활공간 또는 공적 영역에서 다른 인종, 다른 문화의 유입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담론의 핵심을 이루었던 국제화, 이문화, 공생, 다문화 등과 같은 개념들은 “특이하고, 동질적인 일본적(국가) 정체성에 관한 사고를 유지하는데 기능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정교한 용법을 구성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즉 명시적 배제 과정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일본적 정체성은 첫눈에 보기에 배제보다 포용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교한 형태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화, 다문화 공생을 강조하는 정책이나 담론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외국인 이주자들을 ‘포용하여’ 특정한 차이의 범주 속에 가두어두기 위한 강력한 기표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Burgess, 2004). 일본 내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본 국가의 정체성 정치로 인해 사회공간적으로 주변화되고, 권력과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는 일본인들의 주류 사회에의 접근이 거부되고 있다.

특히 보다 최근 일본 경제의 침체와 일본 정권의 보수화는 일본인론에 근거한 국가적 정체성의 지지를 그들 자신의 권력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를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부활시키고자 한다. 즉 일본의 보수 우익성향의 민족주의는 1999년 국회에서 일련의 국가주의적 법률을 잇달아 통과시켰으며, 대중매체는 이에 가세하여 민족적 가치를 ‘정상적’인 것으로 용인하도록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국민 대다수는 ‘국가’에 대한 무자각적인 귀속감·일체감에서부터 자신이 국가로부터 배제되는 쪽에 돌아갈 것이라고는 의식하지 못한 채 소수자에게 부과되는 압력과 폭력에 대해 계속적으로 무관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石田英敬, 2006: 85; 전형권, 2007: 111 재인용). 이러한 상황은 초국가적 흐름이 활발한 도쿄와 같은 세계도시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도시나 지역보다도 더 정교하게 추진되었다(한승미, 2010).

이러한 보수적 정체성의 정치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 나아가 시민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로, 제일 한국조선인들 가운데 신세대들은 “일본사회의 극우보수 성향의 ‘정체성 정치’에 대항하는 디아스포라적 기획, 새로운 정체성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전형권, 2007: 121). 이들은 그동안 스스로를 일본사회의 일부로 인식하고 동화의 압력 속에서 억압되어 왔던 종족집단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고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제화, 인권, 평등, 평화 등의 개념을 재부각시키면서, 일본의 공식적 지배 담론으로 구축되어 온 단일민족 담론에 경합하는 대안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체성의 정치를 추구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하는 전략이나 정체성의 전망은 다양하다. 즉 이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념적 기준체성의 정남한/탈이념/북한 지향으로, 민족적 기준체성의 정모국/탈민족/일본 지향 등으로 분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제3의 길로 대변되는 다문화공생에 대해 오히려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공생’이라는 것이 일본의 억압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일종의 함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전형권, 2007: 126). 즉 외형적으로 공생을 강조하지만 이는 결국 ‘불평등한 공존’을 함의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일본 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현상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단일문화의 이념 및 동질성 담론으로 인해 제일한국조선인을 포함하여 외국인 이주자들이 (재)구성하고 있는 다문화적 이념들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시민권을 제도화할 여지가 없

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가적 지역적 필요에 의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동화 아니며 배제의 양자택일적 압력 속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면서, 동화(특히 귀화, 결혼 등을 통해)된 이주자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그렇지 않은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배제하고 시민권을 부정하거나 차별화하게 된다. 즉 일본 정부는 국적이 부여되는 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한국조선인과 같은 올드커머에게는 특별영주권을 중국귀국자나 남미일계인의 후손에게는 정주권을 부여하지만, 기능실습생에게는 매우 제한된 노동권을 부여하고 무등록(불법)체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정착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과 더불어 시민성의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지구화된 경제(특히 노동시장) 통합과 초국적 이주의 증가는 시민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주자들은 상품이나 자본처럼 지구적으로 이동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물론 국가도 자신의 영토 내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해 이주 및 거주에 관한 조건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주자의 권리와 국가의 권리가 서로 대립하게 되면, 국가는 시민성 투쟁에서 주요한 영역이 되며, 국가적 시민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다. 그러나 근대적 국민국가의 성립 이후 국가적 시민성의 부여 여부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국가적 시민성의 획득을 둘러싼 투쟁은 매우 어렵고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위회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지방적 시민성(local citizenship)’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지방적 시민성’이란 지방정부와 지방 단체들로부터 지방적 공동체의 합법적 구성원으로서 이주자들에게 기본적인 사회정치적 권리와 서비스 부여와 관련된다. 이는 지방정부의 이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정책, 지방적 NGO들에 의해 제공되는 이주자 서비스, 그리고 이주자들을 위한 기본 권리를 요구하고 보장하는 지방적 운동을 포함한다”(Tsuda, 2006: 7).

이러한 지방적 시민성 운동은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적과 국가적 시민성의 부여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자들이 실제 거주하면서 일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사회의 지자체 및 사회단체들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Pak, 2006).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방적 시민성 운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동질성 담론과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적 정체성과 시민성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변형된 일본인론이나 가장된 다문화공생 개념에 바탕을 두고 국가적으로 동질적인 정체성과 배타적인 국가적 시민성이 유지된다면, 국지적 시민성의 보장은 한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지방적 시민성 운동은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과 시민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장은 한편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단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이주자들 역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보편적 권리, 즉 세계시민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6. 결론

외국인 이주자들은 새롭고 낯선 이국땅에 정착하여 살아가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의 과거 삶 속에서 형성된 가치와 생활양식들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은 흔히 이주국과 모국 양국 모두와 연계된 혼종적,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거나 또는 양

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국가적 또는 탈국가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점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아무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아와 타자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을 어떠한 형태나 내용으로든 가지지 못한다면, 인간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국인 이주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정체성에 대해 더욱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정체성은 한편으로 혈통에 의해 주어진 인종이나 민족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활과정에서 체득 또는 형성된 경험이나 문화에 좌우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은 이들의 출신 국가(민족)와 혈통(인종)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민족이나 인종의 의미는 정치적 및 문화적으로 (재)해석된다. 즉 외국인 이주자들을 조건지우는 신체적 및 제도적 요인들은 이들 간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이러한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및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즉 정체성은 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적이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 구성은 새롭게 접하게 된 사람들이나 기관들과 ‘밀고 당기는’ 과정을 통해 상호관련적으로, 그리고 초국적 이주 및 정착 과정에 내재한 국지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들의 분절로 인해 다규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일본에서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은 혈통(인종)과 생활문화를 두 축으로 상호관련적 및 다규모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남아출신 여성이 3/4 정도를 차지하는 결혼이주자들은 본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일본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장소지향적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적 취득을 통해 점차 일본적 국가정체성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귀국자와 남미 일계인은 모두 일본계 혈통을 가지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 중국귀국자들은 일본 국가지향적 정체성을 점차 가지게 되겠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고립된 반면, 남미 일계인들은 언젠가

남미 국가들로 돌아 갈 것이라는 생각하고 지역사회에서 분화된 집주지역을 형성하고 있지만 일본 주민들과의 관계를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올드커머인 제일 한국조선인은 오랜 생활 속에서 체득된 장소지향적 정체성을 가지지만, 국가적 정체성은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하고 있다. 뉴커머의 주를 이루는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은 한정된 기간 체류 후 본국 귀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탈장소적, 탈일본적 정체성을 가진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은 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역단체들의 지원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본에서는 혁신적 성향을 가진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외형적으로 지자체의 혁신/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다문화공생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원화공생을 위해 일본인 주민 또는 외국인 이주자들 스스로 결성한 지역사회단체들은 지자체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지원단체들의 성향은 여성/인권/노동권 지향, 그리고 결혼/공생/동포/조국 지향 등으로 구분될 정도로 다양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와의 관계도 협력과 보완 관계에서 비판과 대안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담론이 바로 ‘일본인론’이다. 19세기 후반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일본 제국주의와 경제 부흥기에 발달한 일본인론은 일본 인종과 문화의 동질성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이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오늘날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에서 전통적 일본인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의 변형으로 예로 하마구치가 주창한 간인주의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간인주의는 일본 국가의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한 모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또는 생활공간)에서 왜 다문화적 정체성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보수적 정권은 여전히 일본인론에 집착하여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과 이들의 정체성 (재)구성을 왜곡시키고 있다. 결론으로 이러한 정체성의 왜곡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체성 정치의 주요한 과제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진정한 다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지역적, 국가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지방적 시민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 Abstract

## Multi-scalar Identities of foreign immigrants and identity politics in Japan

Choi, Byung-Doo

In order to see reconstructing identities of foreign immigrants by type(that is, marriage migrants, returnees from China, *Nikkeijin* immigrated from Latin America, *Zainichi* Koreans, and migrants workers from South-East Asia) in Japan, this paper suggests a typology of identity with two axes; one is the blood which regulates nationality, the other is the way of life cultivated on the basis of places of daily life, and then examines interrelational and multiscalar processes of identity reformulation in relations with Japanese civil society and nation as well as Japanese local dwellers.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at policies for supporting foreign immigrants have been initiated by innovative local governments, and then recently the so-called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s actively pursued by many local governments indifferently with their ideological characters. And hence, characters of local organizations for supporting foreign immigrants in Japan have developed various characters and differentiated themselves in certain relationships with local governments. But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ies, especially implemented by recent conservative political powers, seem to deepen discrimination with foreign immigrants, which are mainly established on the so-called ‘*Nihonjinron*’ emphasizing the homogeneity of Japanese race and culture. It is suggested that the contextualism, a version of the *Nihonjinron*, can be seen as a model with which one can explain why multicultural identity is required, and can be developed, on local lifespaces. Finally it is argued that Japan needs to institutionalize local-global citizenships in order that foreign immigrants reform their real multicultural identity, and that Japan transforming to multicultural society can reconstruct new local, national, and global identity.

Keywords: Japan, Foreign immigrants, Multiscalar identity, *Nihonjinron*, Identity politics

## 참고문헌

- 권순인. 2010. 「일본의 ‘다민족·다문화화’와 일본 연구」. 권순인 편.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4~55.
- 김장권. 1993. 「후기산업 사회 일본의 갈등과 통합」. 《지역연구》, 서울대학교 지역중합연구소 편, 2(3), 69~95.
- 김찬호. 2000.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주민 참여」. 《도시행정학보》, 13(1), 95~115.
- 김현선. 2009. 「국적과 재일 코리안의 정체성: 조선한국적 유지자의 삶과 의식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3, 313~341.
- 박용구. 2005. 「전환기 일본인론의 과제」. 《일어일본학연구》, 52(2), 225~243.
- 박용구·신수진. 2004. 「관계체주의로 본 한국과 일본문화의 정체성 비교 - ‘사이’와 ‘간병’(間病)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8(1), 245~270.
- 백은경. 2001. 「간인(間人)주의에 관한 고찰 -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46, 271~283.
- 이소희. 2001. 「호미 바바의 ‘제3의 영역’에 대한 고찰 - 탈식민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영미문학페미니즘》, 9(1), 103~125.
- 전형권. 2007. 「일본의 보수화와 재일 한인의 국적문제: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동학」. 《한국동북아논총》, 43, 101~130.
- 정근식. 1999. 「지역 활성화와 정체성의 정치. 이해의 정치 - 일본 오이타현 유후인의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6, 79~120.
- 조현미. 2003. 「일본인의 對韓認識과 재일 동포의 아이덴티티 - 일본의 로칼리즘, 내셔널리즘, 리저널리즘」. 《일본어문학》, 23, 495~523.
- \_\_\_\_\_. 2009. 「사회적 최하층계급의 거주지분리와 공동체의식의 변화: 대관부(大阪府) 팔미시(八尾市)의 동화지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6), 803~819.
- 최병두. 2008. 「정체성 형성과 공적 공간의 구축을 통한 도시발전 전략」.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5), 604~627.
- \_\_\_\_\_. 2010.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 활동: (3)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지역사회단체들의 활동 - 오사카와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4(3), 301~325.
- 한승미. 2003. 「일본의 내향적 국제화와 다문화주의 실험」. 《한국문화인류학》, 36(1), 119~147.
- \_\_\_\_\_. 2010. 「국제화시대의 국가. 지방자치체 그리고 ‘이민족(ethnic citizen)’: 동경도(東京都)정부의 ‘다문화주의’ 실험과 재일 한국조선인과의 함의」. 《한국문화인류학》, 43(1), 263~305.

- 한영혜. 2006. 「일본의 다문화공생 담론과 아이덴티티 재구축」. 《사회와 역사》, 71, 155~184.
- \_\_\_\_\_. 2008. 「‘민족명’ 사용을 통해 보는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 - ‘민족’의 한계와 새로운 의미」. 《일본연구논총》, 27, 281~315.
- 途戸一徹와타도 이치로. 2010.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에서 ‘로컬한 공공성 재구축’의 의미: 브라질인의 집단거주단지를 사례로」. 권숙인 편.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69~298.
- 福岡安則. 2001. 『日在韓國·朝鮮人: 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公新書.
- 福岡安則·金明秀. 1998. 『在日韓國·朝鮮人青年の生活と意識』. 東京大大學出版會.
- 濱口恵俊·公文俊平 편. 1982. 『日本の集團主義 - その眞価を問う』. 有斐閣選書.
- 石田英敬. 2006. 「기생적 민족주의 초극의 과제」. 《민족연구》, 25, 85.
- 原尻英樹. 1989. 『在日朝鮮人の生活世界』. 弘文堂. 東京.
- \_\_\_\_\_. 2006. 『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 講談社. 現代新書.
- 淺野愼一(아사노 신이치)·佟岩(통안). 2010. 「중국잔류일본인 고아를 통해 본 인간발달과 공공성」. 권숙인 편.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93~234.
- 青木保. 1995. 『日本文化論の變容 - 戦後日本の文化とアイデンティティー』. 中央公論社.
- Bail, H. L. 2005. "The new Chinese immigration to Japan." *China Perspectives*, 61, 2~17.
- Ball, R. and Piper, N. 2002. "Globalisation and regulation of citizenship - Filipino migrant workers in Japan." *Political Geography*, 21, 1013~1034.
- Befu, H. 2001. *Hegemony of Homogeneity: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Nihonjinron*. Trans Pacific Press. Melbourne.
- bhabha, h.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 Burgess, C. 2004. "Maintaining identities: discourses of homogeneity in a rapidly globalizing Japan." *Electronic Journal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http://www.japanesestudies.org.uk/articles/Burgess.html?ref=Yapma.net>.
- Burgess, C. 2008a. "Celebrating 'Multicultural Japan' - Writings on 'Minorities' and the Discourse on 'Difference'." *Electronic Journal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5 Dec.).
- \_\_\_\_\_. 2008b. "(Re)Constructing boundarie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in Yamagata as agents of multiculturalism." in Graburn, N. Ertl, J. and Tierney, K.(eds). *Multiculturalism in the New Japan: Crossing the Boundaries Within*, Berghahn Books. New York and Oxford, 63~81.
- Carvalho, D. 2003. "Nikkei communities in Japan. in Goodman, R., Peach, C., Takenaka,

- A., and White, P. (eds.). *Global Japan: the Experience of Japan's New Immigrant and Overseas Communiti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5~208.
- Castells, M. 1997.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 The Power of Identity*. Blackwell. Oxford.
- Cupers, K. 2005. "Towards a nomadic geography: rethinking space and identity for the potentials of progressive politics in the contemporary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4), 729~739.
- Douglass, M. and Roberts, G. S. (eds). 2004. *Japan and Global Migration: Foreign Workers and the Adv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Routledge. London.
- Goodman, R., Peach, C., Takenaka, A., and White, P. (eds.). 2003. *Global Japan: the Experience of Japan's New Immigrant and Overseas Communiti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Goodman, R. 2003. "The changing perception and status of Japan's returnee children(*kikokushijo*)." in Goodman, R., Peach, C., Takenaka, A., and White, P. (eds.). *Global Japan: the Experience of Japan's New Immigrant and Overseas Communiti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77~194.
- Graburn, N. H. H., Ertl, J., and Tierney, R. K. (eds). 2008. *Multiculturalism in the New Japan: Crossing the Boundaries within*, Berghahn Books.
- Hall, S. 1990.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n Rutherford, J. (ed),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awrence and Wishart, London, 222~237.
- \_\_\_\_\_. 1996. "Who needs 'identity'?" in Hall, S. and Du Gay, P.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Sage, London, 1~17.
- Harvey, D. 1993. "From space to place and back again." in Bird et al.(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 Global Change*, Routledge, London.
- Kang, Kang, S-J. 2001. "Post-colonialism and diasporic space in Japan." *Inter-Asia Cultural Studies*, 2(1), 137~144.
- Keith, M. and Pile, S. (eds). 1993. *Plac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Routledge, London.
- Kibe, T. 2006. "Differentiated citizenship and ethnocultural groups: a Japanese case." *Citizenship Studies*, 10(4), 413~430.
- Lie, J. 2004. "The discourse of Japaneseness." in Douglass, M. and Roberts, G. S. (eds). *Japan and Global Migration: Foreign Workers and the Adv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Routledge, 70~90.
- Liu-Farrer, G. 2009. "Creating a transnational community: Chinese newcomers in Japan." Weiner, M. (ed. 2nd edn.). *Japan's Minorities: The Illusion of Homogeneit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18~138.
- Murphy-Shigematsu, S. 2004. "Identities of multiethnic people in Japan." in Douglass,

- M. and Roberts, G. S. (eds). *Japan and Global Migration: Foreign Workers and the Adv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Routledge, 196~217.
- Onuki, H. 2004. The myth of homogeneity and the 'others': foreign labor migration and globalization in the case of Japan, Paper presented at the 45th Annual Conven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n Montreal.
- Pak, K. T. 2000. "Foreigners are local citizens too: local governments respond to international migration in Japan." in Douglass, M. and Roberts, G. S. (eds). *Japan and Global Migration: Foreign Workers and the Adv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44~274.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Roberts, G. S. 2000. "NGO support for migrant labor in Japan." in Douglass, M. and Roberts, G. S. (eds). *Japan and Global Migration: Foreign Workers and the Adv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75~300.
- Tai, E. 2009. "Multiethnic Japan and Nihonjin: looking through two exhibitions in 2004 Osaka." in Weiner, M. (ed. 2nd edn.). *Japan's Minorities: The Illusion of Homogeneit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39~161.
- Takenoshita, H. 2006. "The differential incorporation into Japanese labor market: a comparative study of Japanese Brazilians and professional Chinese migrants."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4(1), 56~77.
- Tsuda, T. 2006. "Localities and the struggle for immigrant rights: the significance of local citizenship in recent countries of immigration." in Tsuda, T. (ed), *Local Citizenship in Recent Countries of Immigration: Jap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Lexington Books, Lanham, MD., 3~36.
- Weiner, M. (ed.). 2009(1st edn, 1997). *Japan's Minorities: The Illusion of Homogeneity*, Routledge, Oxford.
- Yamashita, S. 2008. "Transnational migration of women: changing boundaries of contemporary Japan." in Graburn N., Ertl, J. and Tierney, K. (eds). *Multiculturalism in the New Japan: Crossing the Boundaries Within*, Berghahn Books, New York and Oxford, 101~116.

논문투고일 2011.2.8

논문수정일 2011.2.27

게재확정일 2011.3.6